

정부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30.(수) 조선일보, “사라졌던 노동단체 보조금 다시 생겼다”

2. 설명 내용

-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사업은 '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을 '26년도에 복원한 것임
- '24~'25년 지원이 중단됨에 따른 현장 공백과 수요를 보완하고 노동단체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직 밖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복원하였음
 - 실제 양대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상담,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
 - 양대노총 외에도 미가맹 청년·여성노동조합, 지역단위 노동공제협의체 등도 지원하고 있음
- 정부는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「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」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,
- 취약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, 노동권익 보호 인프라 확충, 일터개선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
-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의 경우, 공시제도의 기본 취지와 틀은 유지하면서, 세액공제 당사자인 단위노조와 조합원이 성실히 공시하더라도 제3자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음

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,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개 의무는 상급단체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됨

□ 정부는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보호·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중호 (044-202-7587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현 (044-202-7604)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허기훈 (044-202-7761)
		담당자	사무관	손새롬 (044-202-7766)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백영식 (044-202-7740)
		담당자	사무관	강현주 (044-202-7694)

